

1.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노동 안전, 일자리에 주는 위협

김은진 민변 디정위, 노동위원회 변호사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AI, 즉 인공지능은 노동자와 상생하는 신기술이 아니라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강화될수록 자본은 극단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도외시하여 왔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술 역시, 18세기 영국의 방직기계와 별반 다르지 않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은 노동자들을 장시간·불규칙 노동에 노출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월 여당, 야당 한 목소리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무력화 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노동계의 반발로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 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3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하였고, 이 조치로 연구개발 분야 노동자들은 주 최대 64시간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연구들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이 심혈관계질환, 우울증, 사고의 증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이 4.23배 높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우울 증상·불안장애를 1.62배, 안전 사고 위험을 61% 증가시킵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가족관계를 포함한 삶의 질을 낮추고 여가·수면·일 사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둘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모더레이터 하는 노동자는 감정적, 정신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유저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기 위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 자살영상, 인종차별, 여성혐오와 같은 유해물들을 걸러내는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여도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도 기존 알고리즘을 우회하는 새로운 내용, 형태의 콘텐츠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나쁜 학습데이터로 분류하는 사람의 노동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많은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콘텐츠를 보고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노동을 할수록 그들의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알코올에 의존해 일한다고 했고, 어떤 분은 충격적인 영상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파트너를 소파에서 밀쳐 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밀 유지 조항에 묶여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고통을 드러내지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케이티 통신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명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케이티 통신사는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만 열을 올리며, 인력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며, pc로그기록으로 노동을 감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말 준공된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HMGMA) 생산라인에는 10만대 가량의 차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88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 114대당 노동자 1명이 필요한 셈입니다. 한국의 현대차그룹 국내 최대 공장인 울산의 경우 이 숫자가 44대당 1명 끌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키오스크(무인 주문기)의 급속한 확산은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임시직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영화관,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사람이 담당하던 주문, 결제, 안내 등의 업무가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자 및 노동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인공지능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국민들은 인공지능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고,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 전문가 주도의 경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기술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과 상생, 협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와 함께 논의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끝.

2. 공론장 파괴와 플랫폼 책임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떻게 정치를 양극화하고, 공론장을 파괴하는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모두가 지난 몇 달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털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 기자들의 저널리즘 노동에 어떤 해악을 미치고, 뉴스 공론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는 기자 여러분이 매일 겪는 일이라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전통적인 미디어가 수행하던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인이 저널리즘 원칙과 규범에 따라 수행하던 뉴스편집이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알고리즘에 의한 큐레이션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저널리즘은 점점 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종속되고 있고, 뉴스 이용은 더욱 파편화, 극단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자동화된 허위 정보 캠페인에 따라 허위정보가 반복적으로 생성·재생되면서 정치적 공론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위험도 심각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소통과 의사결정 구조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도 있고, 훨씬 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런 중요한 민주주의의 과제를 안고 디지털 인공지능 미디어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인간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감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투명성 보장, 학계, 비영리기관의 접근성 보장, 알고리즘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감독 체계도 필요합니다.

2. 공론장의 작동방식에 대한 정책은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립돼야 합니다. 민주적인 인공지능 미디어 거버넌스

3. 단기적으로는 생성형 AI 가장 확실한 대응방안으로써 팩트체크 강화

4. 근본적으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미디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환경을 구축

그러나 지금까지 기득권 양당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게 만드는게 사실입니다.

포털 뉴스 서비스 알고리즘 사례

- 국힘/윤정부,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제언에 따른 알고리즘 변경을 보수언론 죽이기로 몰아붙여 방통위 사실조사, 포털 압박
- 민주당도 포털 뉴스 편집의 정치적 공정성을 문제 삼아 포털을 압박하는 입법시도. 뉴스 편집 전면 금지, 알고리즘을 이용한 뉴스 추천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추진

팩트체크

-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 (네이버 후원 압박하여 지원 중단)
- 팩트체크넷 (편향성 문제 삼아 해체)
- 대신, 보수단체 뽑은 가짜뉴스 백서 시상식 (연간 수천만원씩 지원)
- 문재인 정부 : 가짜뉴스 근절대책 추진, 방통위 압박

지금 대선국면에서도 양당은 민주 파출소나

국민 사이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가짜뉴스'라는 허수아비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민주파출소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시민의 디지털 안전은 보장되지 않고, 국민사이렌을 아무리 울려도 공론장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양당이 하루빨리 무한 정쟁에서 벗어나 여리 단체들이 제기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기를 직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저널리즘을 발전시키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내란청산을 위한 차기정부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3. 기후파괴와 생태위협: AI 산업 중심 대선공약, 지속가능성을 묻는다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 이민호 활동가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AI 시대에 인간의 권리와 생명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기후와 생태는 어떤 위치에 놓여야 하는가를 함께 묻는 자리입니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AI 산업 중심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AI 강국', 'AI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의 과정에서, 환경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생태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는 산업 발전 중심의 AI 정책을 또 하나의 기후위기 가속화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을 위한 수입천댐 추진과정에서 하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훼손,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개발의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동해안의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전라도의 재생에너지를 반도체공장과 데이터센터로 송전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고압 송전탑이 지역 주민들의 삶터와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이유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고, 가스발전소 인허가를 추가로 추진하는 현실은 AI 산업의 비용을 결국 기후, 생태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합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중소도시 전체의 소비량을 상회하며, 생성형 AI와 같은 고성능 모델은 천문학적인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결과, AI 산업의 탄소 배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혁신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환경과 생명의 희생이 전제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발전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디지털 전환 또한 지속가능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정부가 AI 산업을 무한 성장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AI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평가하고,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막대한 첨단 AI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과 탄소중립 경로 공개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AI 개발과 활용이 생태계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물습니다. AI 산업이 정말 미래지향적이라면, 왜 자연은 파괴되고 기후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까? 기술의 진보가 왜 다시 화석연료와 핵발전이라는 구시대적 에너지에 기대야 합니까?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희생시키는가에 따라 정의로울 수도,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AI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전환,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 AI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인권 침해와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회우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

먼저 딥페이크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법 합성물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양상은 훨씬 더 악랄하고 교묘해졌습니다.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넘어서 이제는 일반 시민조차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인을 통한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과 디지털 파일의 특성 상 피해 범위가 무한대에 가까워 피해자들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힘을 들여야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지고 있을까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 학습과 출력물 생성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거나 배치한 기업의 책무를 묻는 일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 편향과 차별 문제입니다.

AI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사회의 기존 편견을 더욱 정교하게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채용 알고리즘이 여성 지원자나 소수 인종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금융권에서도 대출 심사 알고리즘이 같은 조건을 가진 신청자 중 유색인종 신청자의 승인률을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위험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공공복지 서비스나 보험 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차별적 편향이 드러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알고리즘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이 차별적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알기 어렵습니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알고리즘은 차별을 숨기고, 피해자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인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설불리 도입하는 것은 차별을 확산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이 첨단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며 얼굴이나 걸음걸이 등 생체정보 인식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은 자기 스마트폰의 잠금해제에서부터 CCTV를 통한 실시간 용의자 추적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기술을 사용하면 전국에 깔린

CCTV와 결합해 개인의 모든 이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입니다. 해외에는 노동 공간에도 CCTV가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사례도 이미 있고, 국경에서도 감시 기술이 사용 중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얼굴인식 기능을 제공하며 온라인에서도 자신이 식별되고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생체인식기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프로파일링하여 개인의 인권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술 발전은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